

## 대 검 찰 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

---

1.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는 2022년도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실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2.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은 붙임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2. 5. 20.(금)까지 대검찰청 형사1과 정책연구과제 담당자(박성국 검찰수사관)에게 이메일([psk7100@spo.go.kr](mailto:psk7100@spo.g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검찰정책수립 및 업무 등에 활용되고,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www.prism.go.kr](http://www.prism.go.kr))을 통하여 공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제명 :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붙임 : 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1부.  
2.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

## 검찰총장



수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한양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충북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충남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중앙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제주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전북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전남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인하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원광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영남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연세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아주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성균관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서울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서강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부산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동아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고려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희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북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건국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강원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전결2022.05.11.

검찰수사관 **박성국**

검찰사무관 **박원석**

형사1과장

**김민준**

협조자

시행 형사1과-5346 (2022.05.12.)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www.spo.go.kr

전화 0000

전송

/psk7100@spo.go.kr

/ 비공개(4)

<서식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		
신청부서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공무원	박성국
연구방식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탁형 용역    2.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형 용역    3. <input type="checkbox"/> 자문형 용역		
연구기간		2022. 6.       ~       2022. 12.       (6개월 )		
예산 규모	항 목	1. <input type="checkbox"/> 포괄 연구개발비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금액	금 이천오백만 원 정(₩25,000,000)		
계약방법		수의계약		
연구의 필요성 (긴급한 사유)		○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등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검색 ② 중복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연구내용		○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 - 허위 신고 및 고소는 상대방을 피의자로 만들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피해 심각 - 살인·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허위 신고 및 고소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무고죄 엄벌 필요 ○ 형사정책적 검토 - 무고죄 법정형 강화, 성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필요 -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예상되는 범죄 예방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 필요 ○ 무고죄 관련 입법례 및 각국 실태 분석 - 무고죄 법정형 상향 및 성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관련 입법례 및 각국 실태 등 분석		
연구결과 활용방안		○ 무고죄 관련 수사 및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		